

2차 대전 이후 기적의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¹⁾

조 장 옥

1. 머리말

20세기 후반은 경제적인 면에서 기적의 시대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혁명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기적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기적은 주로 후발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1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일어났다면 20세기 후반의 기적은 20~30년 사이에 급속히 일어났다는 특징을 갖는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기적의 유형은 독일유형과 일본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독일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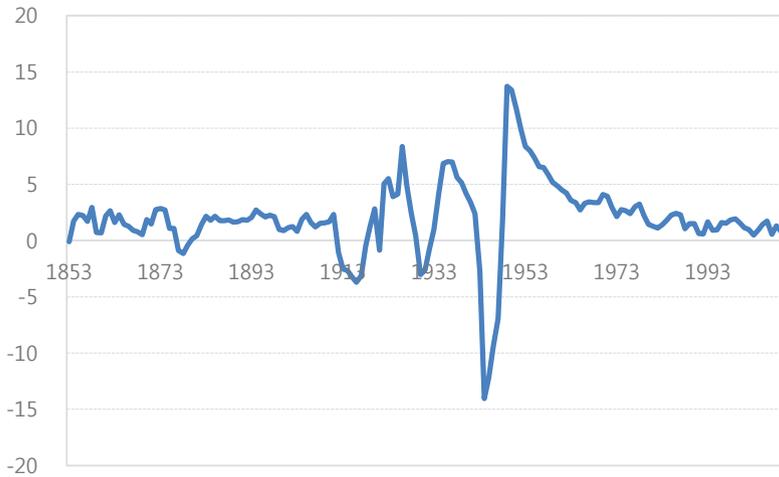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기적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은 이미 산업화된 나라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10년 이전 독일의 1인당 GDP는 평균적으로 미국의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1차 대전에 패하고 독일의 1인당 GDP는 미국의 50% 아래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정권 아래에서 통제경제를 실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1인당 GDP는 미국의 8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의 패전 이후 독일의 1인당 소득은 다시 미국의 30% 이하로 추락하였다. 그리고 1970년 이전에 미국의 70% 정도로 회복하였다.

(1) 이 논문은 조장옥(2015), Cho(2016), 조장옥(2016)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세 논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자료: The Maddison-Project (2013), [http://www.ggd.net/maddison/maddison project/home.htm](http://www.ggd.net/maddison/maddison%20project/home.htm).

〈그림 1〉 1인당 소득비율(독일/미국, %)



자료: ibid

〈그림 2〉 독일의 잠재성장률(%)

〈그림 2〉에 독일의 1인당 GDP 증가율이 나타나 있다. 그림의 잠재성장률은 주어진 연도와 그 연도의 과거 2년 그리고 미래 2년의 평균성장률로 구하였다. 경기변동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인당 GDP증가율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한다. 종전 후 독일은 처음 매우 높은 잠재성장률로부터 점차 장기 저성장경

로 수렴하였다. 즉 독일의 경제성장은 잘 알려진 솔로 경제성장모형(Solow growth theory)이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 중에 파괴된 자본의 재축적을 통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수렴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평상시에 경제적인 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적인 실험을 강요한다. 특히 독일과 같은 패전국의 경우 그러한데 전쟁 전과 후에 경제체제가 완전히 변화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1936년부터 나치정권은 독일의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경제로 바꾸었다. 나치정권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격과 임금은 1936년 가을 수준으로 동결한다. ② 소비재와 식량은 배급제를 따른다. ③ 노동, 원자재 및 주요 상품은 중앙에서 배분한다. ④ 농부들은 주어진 식량 쿼터를 의무적으로 공급한다. ⑤ 주택에 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한다.⁽²⁾ 이와 같은 나치의 통제정책은 전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이는 온갖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와 행정력이 없었다.

종전 이후의 혼란 속에서 독일 국민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식량과 연료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전시에 통화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 발생하였고 당시 독일의 공식 화폐인 라이히스마르크(Reichsmark)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암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암시장에서의 교환의 매개수단은 담배였다. 그나마 암시장의 거래는 큰 역할을 못하였고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에서 나오지 않고 퇴장되었다.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시장에서 가치가 없는 공식화폐를 받고 재화를 공급할 공급자는 당연히 없었던 것이다.

독일의 개혁은 1948년 6월 20일에 미국과 영국의 점령지역(Bizone)에서 단행된 화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행된 화폐개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라이히스마르크를 도이치 마르크(Deutsche Mark, DM)로 대체하고 화폐공급을 크게 감소시킨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40DM을 공급하고 두 달 뒤에는 20DM을 공급한다. 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60DM을 지급한다. 이 이외의 모든 개인 소유의 라이히스마르크와 은행예금에 대하여는 10:1의 비율을 적용한다. 둘째, 사적 및 공적 부채를 구조조정 한다. 임금이나 집세, 연금소득은 라이히마르크와 도이치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1로 유지하되 그 이외의

(2) Giersch, Paque and Schmieding(1992), pp. 16-36.

모든 부채는 교환비율을 10:1로 한다. 셋째, 새 통화인 도이치 마르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 중앙은행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는 권한을 주고 ②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금한다.

이와 같은 화폐개혁을 단행한 직후 영국과 미국 점령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에르하르트(Ludwig W. Erhardt, 1897-1977)는 중앙계획체제(system of central planning)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재도입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식량의 가격통제를 해제하고 재화의 배급제를 폐지하였다. 자원의 배분도 시장에 맡겼다.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해 서독(영국과 미국의 지배지역)에서는 1948년 후반부터 가격통제가 사라지고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가 열렸다. 가격통제가 아직 남아 있는 분야는 기초 식료품, 석탄, 철광석, 철강, 원유와 같은 원자재, 임금과 집세,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이었다.

화폐개혁, 시장개혁과 더불어 크진 않지만 조세 또한 개혁되었다. 소득세율을 1/3 낮추고 기업소득세를 60%에서 50%로 낮추었다. 그리고 소득을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즉 세제개혁을 통해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자 한 것이다.

개혁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 점령지에서는 하루아침에 물물교환이 화폐경제로 바뀌었다. 재화와 노동의 대가로 도이치 마르크가 사용되고 상점에는 전에 없던 재화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암시장은 거의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40DM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아에 시달리며 창백한 얼굴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도 사라졌다. 소원도에 갑자기 등장한 풍부한 재화는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개혁은 심리적인 효과만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1948년의 성장률이 치솟은 것은 이와 같은 개혁의 결과였던 것이다. 특히 가격통제가 사라진 제조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아직 가격통제가 남아 있던 석탄, 철광 등의 생산 증가는 미미하였다.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생산설비를 이용한 결과, 나타났던 자본의 감소도 드디어 멈추었다. 즉 종전 후 1948년 6월까지 자본이 7.3% 감소하였으나 1948년 후반부터는 연 5.6%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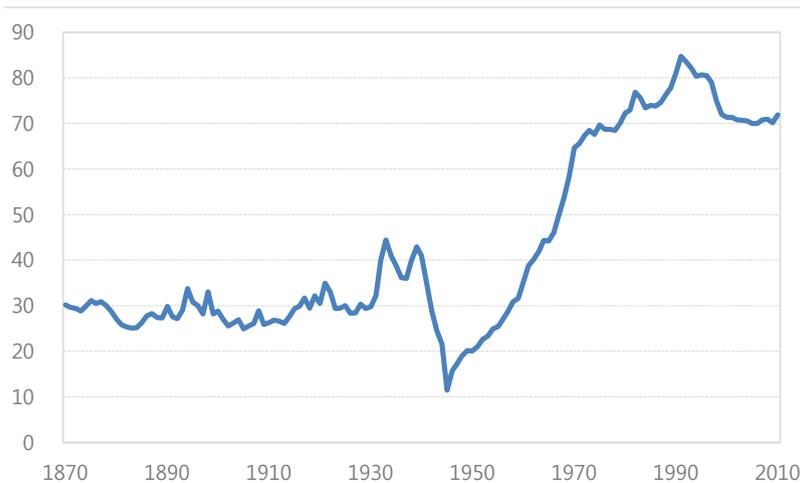
1948년 6월의 개혁 이후 독일의 경제성장은 앞서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시장개혁 이후 1인당 소득증가율은 구매력평가로 1948년 16.3%, 1949년 15.8%, 1950년 18.2%였다. 라인강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성장은 자본이 부족할 때 솔로 경제성장모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3. 일본의 기적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은 <그림 3>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명치유신(Meiji Restoration) 이후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30% 정도에서 오래 동안 정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1인당 GDP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기간에 미국의 40% 정도로 증가하지만 그것은 전비지출 때문이었으며 당시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된 것이 아니라 극도로 피폐하였다.

전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때 미국의 10%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빠르게 증가한다. 즉 일본의 미국 따라잡기(catch-up)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991년에는 일본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85%까지 증가하였다. 전후 45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일본은 긴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lost decades)이다. 이 기간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70% 정도로 감소하였다.



자료: ibid

<그림 3> 1인당 소득비율(일본/미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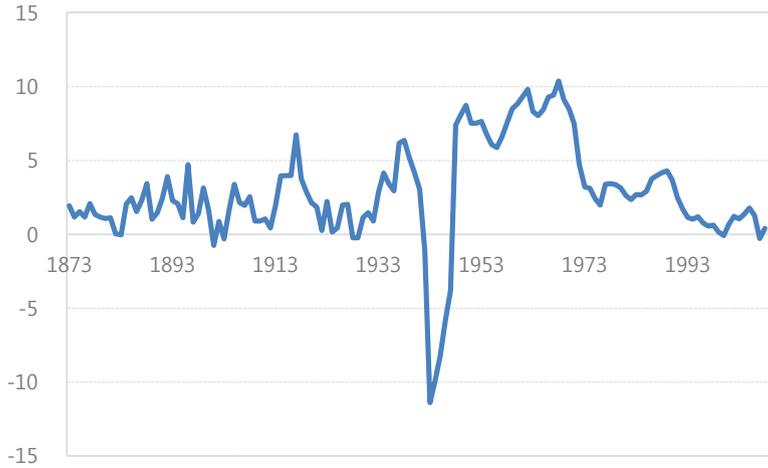
일본의 전후 잠재성장률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일본은 전쟁 이후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1946년부터 1970년까지 1인당 GDP 성장률은 8.3%로 약 8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1인당 소득은 이 기간 25년 동안에 미국의 70%까지 따라잡았다. 그러나 1971년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저성장경로로 수렴해 간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때문에 잠시 성장률의 하락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이전과 비교하여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일본의 기적이 가능하였던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일 수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말해 독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2차 대전 직전 일본경제는 소련의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통제경제였다.³⁾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지극히 가부장적인 계급사회였다.

1945년 10월 일본 점령군사령부(the General Headquarters)가 실시한 첫 개혁은 일본의 민주화였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1946년 1월 천황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폐기하고 평화를 국가목표로 정하였다. 나아가 후속조치로 교육기본법(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노동기준법(Labor Standards Act) 등이 제정되었으며 통제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

전후 일본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농지개혁과 재벌의 해체 그리고 닷지 개혁(Dodge reform)이었다. 1946년부터 1949년에 걸쳐 시행된 토지개혁은 일본인

(3) Nakamura(1995), pp. 3-10. 1930년대 후반 일본에는 군부를 제어할 만한 정치권력이 없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적 결정은 군부가 의도하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을 발발할 즈음에는 군수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막대한 군수물자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파산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직접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1937년 「계획청(Planning Agency)」이 설립되어 그 해 가을부터 「물자동원계획(Material Mobilization Plan)」을 수립하고 1938년 봄에는 「국가총동원법(National General Mobilization Law)」을 제정하여 정부가 노동력의 징집,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관해서까지 지침을 내리게 되었다. 경제통제를 위한 모든 권한이 정부관료집단에 위임되기에 이른 것이다. 물자부족이 심화되자 「물자동원계획(Material Mobilization Plan)」이 1938년 6월 한 차례 강화되고 1939년에는 정부의 통제가 경제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39년 「9월 18일 정지명령(September 18 Stop Order)」에 따라 모든 임금과 가격에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통제 아래 두었다. 1940년에는 금융부문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기업(자본)의 소유주를 경영에서 배제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여야만 하는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



자료: ibid

〈그림 4〉 일본의 잠재성장률(%)

의 경제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하였다. 2차 대전 이전 일본 농촌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그리고 봉건적 지주와 가신, 소작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시대의 체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점령군사령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부채지주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토지를 보유하게 하는 강력한 토지개혁을 시행함에 따라 소작인도 독립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농지개혁 후 1950년대부터 일본의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산업재벌은 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독점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비대해져 있었다. 따라서 점령군사령부는 재벌을 해체하여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점령군사령부는 재벌을 해체하여 시장경쟁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시 군사정부에 협력한 인사들을 공직에서 해임하였다. 이와 같은 두 조치는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새롭고 젊은 인재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불러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1947년 가을에 제정된 ‘경제권력 과집중제거법(Elimination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w)’에 따라 엄격한 반독점법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은 전후 일본 산업에 경쟁을 유도하였고 이는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었다.

닷지 개혁은 소련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일본을 부흥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나온 개혁이다. 닷지(Joseph M. Dodge, 1890-1964)는 독일의 화폐개혁(1945-1946)을 이끈 인물로 재정·금융정책에 대하여 고전적(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경제학

자였다.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정부의 개입을 철저히 거부하였으며 자본축적과 부흥은 전적으로 일본 국민 곧 시장참가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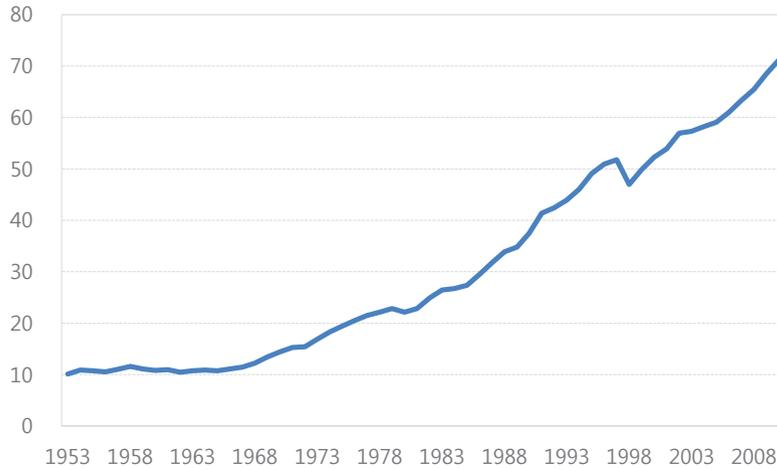
이런 원칙에 따라 닛지는 균형예산, 통화증가율 억제, 보조금의 축소 및 폐지의 세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일본은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정부는 수출과 산업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중환율제를 시행하였다. 즉 일본 정부가 수출품을 높은 환율에 사서 외국에는 그보다 낮은 환율로 판매하고 있었다. 닛지는 이와 같은 관행을 모두 폐지하고 일본도 국제경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닛지 플랜에 따라 극단적인 시장개혁이 이루어지고 일본에 불황이 찾아올 즈음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전쟁특수라는 행운까지 맞이하여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의 전후 경제적 기적은 통제경제를 시장경제로 개혁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일본의 기적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와 <그림 4>를 비교하여 보면 2차 대전 이후 두 나라의 성장경로가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이 부족한 경우 솔로 경제성장모형에서 나타나는 패턴 곧 처음에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 저성장경로로 수렴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부터 1970년경까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71년경부터 장기 저성장경로로 수렴이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시기가 성장률이 하락하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라는 점이다.

4. 한국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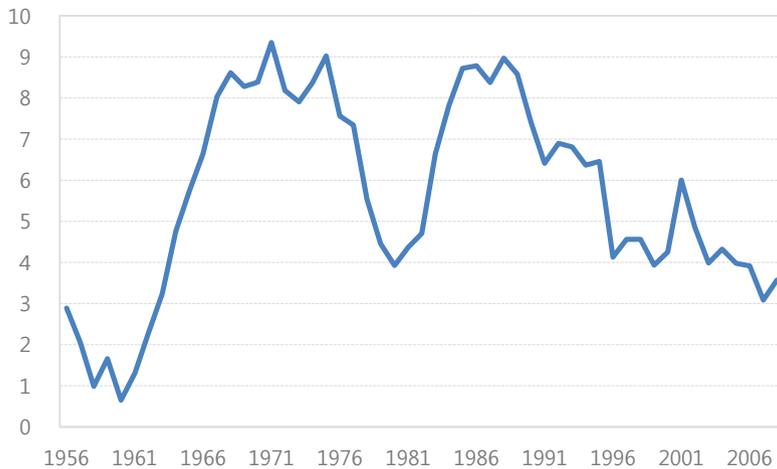
왜 독일과 일본의 성장패턴이 다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국의 기적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였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1965년까지 미국의 10%대에 머물러 있었다.⁽⁴⁾ 한국이 미국의 소득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부터이다. 1966년 한국

(4)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66달러였다. 이는 미국 1인당 GDP (\$2,433)의 2.7%에 불과한 것이었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90달러였다. 이는 미



자료: ibid

〈그림 5〉 1인당 GDP비율(한국/미국, %)



자료: ibid

〈그림 6〉 한국의 잠재성장률(%)

국 1인당 GDP의 2.8%였다. 한국전쟁 이후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의 선도 경제인 미국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었다. 201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화 27,964달러로 미국의 1인당 GDP의 50퍼센트를 초과하였다. 2014년 한국인들은 1953년 1년 동안 번 (실질)소득을 1주일에 벌었다.

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1.1%이었으며 1076년 20.5% 처음 20%를 넘어섰다. 50%를 넘어선 것은 2,000년이고 2010년에는 70%를 넘어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빠른 성장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동안 한국은 정체상태에 있었다. 1956년부터 1965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DP의 잠재성장률 평균은 2.6%였다. 그리고 고도성장이 시작된 1966년부터 1989년까지는 7.4%였다. 1990년경부터는 장기저성장으로의 수렴이 일어난다.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80년과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미국의 1인당 소득을 빠르게 따라잡은 것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도성장기였다.

5. 2차 대전 이후 기적의 패턴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기적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그림 2>와 <그림 4>로부터 분명하다. 그리고 <그림 6>에 나타나 있는 한국의 기적은 일본 패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패턴은 왜 독일과 다르게 나타난 것일까? Cho(2016)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기적의 패턴이 독일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화의 정도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즉 독일은 2차 대전 이전 이미 산업화가 성숙된 경제였다. 1950년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차 산업에 42.9%, 3차 산업에 32.5% 그리고 1차 산업에 24.6%가 종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독일은 산업화가 거의 완성된 경제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산업 21.8%, 3차 산업 29.6%, 1차 산업 48.6%였다. 그리고 일본의 농촌인구는 전체의 62%였다. 다시 말해 1차대전 이후 일본은 근본적으로 농업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가 이미 이루어진 경제에서 독일과 같이 자본이 파괴된 경우에는 Solow (1956, 1957)의 경제성장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장패턴, 곧 <그림 2>의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노동인력이 풍부한 경제에서는 Lewis(1954)의 경제발전모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동력이 희소해지기 전까지 자본의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이 희소해지면, 곧 산업화가 고도화되면 Solow패턴의 저성장으로의 수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그림 4>와 <그림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성장패턴이 나타난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기적은 한국과 일본의 패턴이 대부분이다.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고 불리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의 중국, 폴란드, 슬로베니아와 같은 동유럽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기적은 모두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6. 기적의 조건

1962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까지 한국은 물적 자본이 부족하였으며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았다. 1953년 평균소비성향이 86.5%였으며 저축률과 투자율은 각각 10.9%, 14.7%였다. 그리고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평균소비성향, 저축률, 투자율은 각각 83.1%, 10.1%, 13.1%였다. 즉 한국은 노동력 이외에는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저축률 또한 낮았다. 그러나 노동이 풍부한 경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한 노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즉 인적 자본이 갖추어진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투자증가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적 자본이 갖추어진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한국이 경험한 바와 같은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율의 빠른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초기 발전단계에서 투자를 위한 국내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는 국내저축의 증진이고 둘째는 외국 자본의 도입이다. 특히 외국 자본의 도입은 차입과 외국의 직접투자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차입에 의해 그리고 싱가폴은 외국의 직접투자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기 발전단계에서 자본의 생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의 도입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제도와 부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재산권을 비롯한 제도의 정립이 우선하여야 하고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만 한다. 때로는 기업의 사적 해외부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같은 과감한 외국 자본 도입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입된 외자는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여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바른 제도와 시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산업정책을 통해 발전시킬 산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처를 따로 두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정책은 수입대체와 대외개방정책 가운데 협소한 국내시장을 해외로 확대하는 대외개방정책을 따라야만 한다. 대외개방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외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1) 인적 자원을 갖춘 노동이 풍부한 경우 초기 발전단계에서 자본의 생산성이 높고 체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이를 타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리더십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2) 외국의 기술도입을 위한 인적 자본의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3)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잘 계획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즉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하고 산업구조를 점차 선진 단계로 이행하는 계획과 절차, 방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대외개방은 시장의 확대와 외국 기자재 수입을 통한 기술 도입에 필요한 외화의 획득을 위해 필수적이다. (5) 이 모든 것은 풍부한 노동력 때문에 높게 지속되는 자본 생산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성과 적절한 제도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전화: 02-705-8769, 010-8641-9207
E-mail: choj@sogang.ac.kr

참고문헌

- 조장옥(2015): “한국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이론모형을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서강대학교.
- _____ (2016): “시장경제: 펀더멘털 10가지,” 미발표 원고, 서강대학교.
- Cho, J.-O.(2015): “The Rise and Fall of Miracl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27, 2, 1-38.

Giersch, H., K.-H. Paque and H. Schmieding(1992): *The Fading Mira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W.A.(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 139-191.

Nakamura, T.(1995):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Solow, R.M.(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65-94.

_____(1957): “Technical Change and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9**, 312-320.

